



추석 식품 위생점검 추석(22일)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이 2일 두암동 홈플러스 지하 1층 매장
에서 각종 식품에 대한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음란전단 뿌리 뽑히나

70% 뿌린 '형제 총책' 검거 ... 주택가로 '풍선효과' 지속단속해야

광주지역 유흥가에 음란전단지를 배포해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챙긴 '40대 음란전단지 총책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대대적인 단속 이후 음란전단지가 일반 주택가에도 뿌려지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대 음란전단 총책 검거=광주 서부경찰은 2일 음란전단지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44)씨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음란전단을 배포하도록 지시한 박씨의 동생(41)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형제는 지난 2009년 6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와 북구 용봉동 일대 유흥가에 전단

지 약 2000만장을 배포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총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형제가 뿌린 음란전단지는 광주지역 전체 성매매 전단지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생 12명 등 성매매에 가담한 일당 18명을 붙잡았으며, 인쇄업자와 성매매여성 등 20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주택가로 선회=주로 유흥가 일대에 뿌려지던 음란전단지가 단속이 강화되자 주택가로 방향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단속 영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구 상무지구 일대는 최근 음란전
단지가 자취를 감춘 반면 북구 문흥

동 등 주택가에서는 심심치않게 발견되고 있다.

◇지속 단속이 관건 = 경찰은 4일부터 이틀간 광주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에 대비해 지난 7월 ‘불법 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2개월 만에 광주지역 최대 성매매알선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음란전단지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때문에 음란전단지 단속 영역을 늘림과 동시에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무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55)씨는 “최근 음란전단지를 단속하는 구청 직원과 경찰을 자주 봤는데,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남대 의대체제 완전 복귀

의전원 폐지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병행 운영해온 12개 대학 중 동국대를 제외한 전남대 등 11개 대학이 의전원을 폐지하고 의대로 복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국대만이 유일하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의대와 의
전원을 함께 운영해온 12개 대학으로
부터 향후 학제운영계획을 제출받은
결과 충북대·중앙대·영남대·전남

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 등 7개 대학이 오는 2015년부터 의전원을 없애고 의대로 완전 복귀한다는 계획서를 냈다고 밝혔다

동아대·서울대·고려대·아주대 등 4개 대학도 사실상 의전원을 의대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내부 승인절차를 밟고 있어 곧 최종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국대는 의대로 돌아가지 않고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주언 전 서구청장 항소심서 집유

선거법위반·뇌물수수

광주고급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일 공무원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전주언(62) 전 광주 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전 구청장이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 전 구청장은 두 가지 혐의 모두 형 집행정지 요건에 따라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선거법 위반과 뇌

물사건에 모두 개입한 임모(56·4급)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선거법 위반)과 벌금 1000만원에 자격정지 3년(뇌물)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관권선거와 뇌물수수는 죄질이 극히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공직에 30~40년간 몸담으며 이렇다할 과오가 없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전 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1천3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하고, 지난해 승진자 2명에게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 전 구청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3일 사퇴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2500만  고객을 위한 행복버스의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와 반을 움직일지도,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illegible][illegible]